

# 응급실 뱅뱅이 막는다... 광역상황실서 중증환자 병원 선정

### 정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경증 119가 이송 광주·전남·전북서 내달부터 운영... 하반기 전국 확대

이른바 '응급실 뱅뱅이(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의료 자원 현황에 따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환자 이송 병원을 결정하고, 경증 환자 이송은 119구급대가 책임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광주와 전북, 전남에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골자는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 마련, 중증도에 따른 이송 병원 선정, 정보 공유 강화 등이다. 정부는 우선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로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끼리 개정에 합의하게 했다. 지침 개정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이 실행된다. 이송체계 혁신안에 따라 119구급대는 중증환자(pre-KTAS 1~2등급) 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프리-케이타스(pre-KTAS)는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도구로, pre-KTAS 1~2등급 중 심정지나 중증 외상을 겪은 환자인 경우 사전에 지정된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된다. 그 밖의 중증환자는 광역상황실이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이송 병원을 선정한다.

만일 적정 시간을 넘겨 이송이 늦어지면 광역상황실이 중환자실, 수술실 등 의료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환자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 수용 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환자 중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구급대에서 환자 이동을 책임진다. 비교적 경증인 pre-KTAS 4~5등급 환자의 경우 수용 문의 없이 지침 등을 고려해 이송 병원이 결정된다. 중간 단계인 pre-KTAS 3등급 환자는 언제든 지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병원을 찾는다. 정부는 효율적 이송을 위해 절단된 손·발 수술(수지 접합),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고려해 상황별·중증도로 이송할 병원 목록을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송체계 혁신안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환자 정보 항목을 정비하고, 119

구급대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병원과 광역상황실에 전달한다. 또 병원의 의료 자원 현황 정보도 정비해 환자 수용 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송체계 혁신안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표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윤혜인 대표, 국민의당 김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한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김 원내대표. **한민**

## 민주당 광주·전남, 경선 선관위 구성 완료

### 윤종해·김순호 위원장 맡아... 4월 20일까지 공천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관리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경선 관리 체계가 본격도에 오르면서 지역 선 거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시·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관위 설치와 구성을 완료했으며, 이번주 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시당 선관위원장은 윤종해 한국노 총 광주본부 의장이 맡았다. 선관위는 총 7 명으로 구성됐다. 전남도당 선관위원장은 김순호 도당 예비후보자자격을 심사위원장이 맡았으며, 역시 7명 체제로 꾸려졌다. 시·도당 선관위는 여성 3명(43%), 청년 2명(29%), 외부 인사 1명으로 구성해 다양성을 반영했다. 앞서 시장은 공천관리위원장에 흥기문

전남대 명예교수를, 도당은 박준수 전남도 감사관을 각각 임명했다. 공관위는 시장 13명, 도당 15명으로 운영된다. 공관위가 후보자 심사를 통해 컷오프 여부와 경선 후보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선관위는 경선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심판 기능을 수행한다. ARS·현장투 표 방식 설계와 관리, 후보자 검증 및 단속, 경선 룰 의결 등 권한을 갖는다. 시·도당은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기초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 방식과 일정 등을 확정하고, 공정 경선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시·도당 관계자는 "중앙당 방침에 따라 4월20일까지 모든 선거구 공천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이에 맞춰 지역 경선 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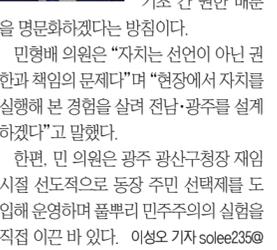
## "전남광주특별시 시·군·구 권한 강화"

### 민형배 "마을자치 모델 구현... 분권형 자치특별시 설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은 25일 "전남·광주 393개 읍·면·동과 27개 시·군·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통합은 행정 효율을 위한 수단일 뿐, 권력의 상층 집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전남·광주는 권한을 모으는 특별시가 아니라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자치특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세 읍·면·동 환원, 마을 자치재정 확대, 마을계획·예산·평가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 제도화를 통해 전남·광주를 세계를 선도하는 마을자치 모델로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민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자치기구화와 읍·면·동장 주민선택제의 정착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특별법 제10조(통합특별시의 관할 구역에 두는 시·군·구의 지위 및 권한 특별)를 근거로 통합 이후에도 27개 시·

군·구가 형식적 하부행정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초 자치단체의 인사·재정·조직 자율성을 확대하고 광역과 기초 간 권한 배분을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의원은 "자치는 선언이 아닌 권한과 책임의 문제"라며 "현장에서 자치를 실행해 본 경험을 살려 전남·광주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은 광주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선도적으로 동장 주민 선택제를 도입해 운영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험을 직접 이끈 바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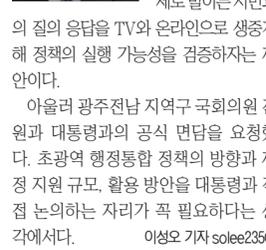
## "통합특별시 국가지원 30조로 확대를"

### 정준호, 활용 방안 공개 토론회·이재명 대통령 면담 제안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 갑, 국토교통위원회·사진)은 25일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최초 2년간 20조원, 4년간 총 30조원 규모의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관련해 "타지역보다 앞서 빠르게 추진된 통합에 합당한 인센티브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타 지역 갑, 국토교통위원회·사진)은 25일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최초 2년간 20조원, 4년간 총 30조원 규모의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관련해 "타지역보다 앞서 빠르게 추진된 통합에 합당한 인센티브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원 재정 활용 계획은 물론 △미래 산업 및 일자리 전략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도시 구조 설계 방안 등을 주제로 열리는 시민과 의 질의 응답을 TV와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는 제안이다. 아울러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 원과 대통령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초광역 행정통합 정책의 방향과 재정 지원 규모, 활용 방안을 대통령과 직접 논의하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생 각에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 6·3 지방선거 브리핑

### "소통·연대... 시민주권도시 순천 열겠다"

#### 서동욱 전남도의원, 순천시시장 출마 선언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사진)이 25일 제9회 지방선거 순천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서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을 통해 "소통과 연대로 순천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주권시장을 열겠다"며 "지금 순천은 집권 여당과의 단절, 시대정신과의 단절 속에 정치적·행정적 고립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신대지구 공공개발 이익 환수 문제와 쓰레기 소각장 입지 갈등 등을 언급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행정은 공허하다"고 지적 했다. 이어 "이제 순천은 시민의 말이 행정의 출발점이 되는 도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4시간 원스톱 시민소통 센터 설치 △정책간담회 상례화 등 '시



민주권도시' 공약을 제시했다. 경제분야에서는 2차전지·반도체 RE100 산업단지 유치, 공공개발 이익 환수 제도화, 도시 순환 트램 도입 등을 약속했다. 또 순천만국가정원 가족형 리조트 조성, 남도 삼백리길 관광 개발, 반값 여행 도입 등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과 함께 통합돌봄체계 구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순천형 만원주택 추진 등 복지·청년 정책을 내놨다. 서 의원은 "시민이 주인인 순천을 만들겠다"며 "순천의 내일을 시민과 함께 열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북구-담양 초광역 경제·문화 벨트 구축"

#### 김동찬 예비후보, 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통과 환영

김동찬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특보·사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의 법사위 통과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 대한민국 남부권에 새로운 메가시티를 창조하는 역사적 쾌거"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행정통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위대 한 사·도민의 승리"라고 평하면서 행정 통합이 가져올 북구의 시대적 역할과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북구는 지리적·문화적으로 담양과 맞닿아 깊은 교류를 이



어은 광주·전남 상생의 상징적 관문"이라며 "행정구역의 장벽이 허물어지면 북구의 첨단 인공지능(AI)·미래 산업 인프라와 담양의 수려한 생태·관광 자원이 완벽하게 융합하는 '초광역 경제·문화 벨트'가 완성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 메가시티의 진정한 성공 여부는 결국 지역 경제의 자생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에 달려 있다"며 "광역 교통망 확충과 산업 생태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북구를 유망한 기업이 모여들고 청년이 머무는 '초광역 경제의 심장'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 "취임 100일 내 체감 가능 변화 만들 터"

#### 조호권 예비후보, 8대 핵심공약 발표

조호권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사진)가 '신나는 변화,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한 8대 핵심 공약을 내놨다. 조 예비후보는 25일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공약발표회를 갖고 "취임 100일 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복지, 경제, 생활, 행정 혁신을 통한 '8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어르신 통합돌봄 체계 구축 △상시 돌봄 정책 강화 △마을 중심 교육·돌봄 확대 △공공경제 활성화 정책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생생한 교통 개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SI 기반 행정혁신 등으로 구성됐다. 조 예비후보는 핵심 공약을 기반으로 "기업 현장에서 경제를 배운 경제통,



광주시의회 의장으로 행정을 경험한 행정통, 사회서비스 원 초대 원장으로 북구의 최전선을 지켜온 복지통으로서 북구의 변화를 책임 있게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해당 공약이 책상에서 만든 정책이 아닌 현장 간담회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화한 실행 중심 정책"이라며 "주민 중심의 행정, 실행하는 행정을 통해 북구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전했다. 조호권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주민 의견 수렴과 정책 보안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